

19대 총선 결과 분석과 전망

이상훈, 전준범

<요 약>

19대 총선은 새누리당의 과반수의석 확보로 끝났다. 민주통합당의 전략적·전술적 실패와 리더십 부재, 무원칙한 야권연대가 빚어낸 일이다. 또한 이번 선거과정에서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 통합 시도, 민주노총의 통합진보당에 대한 지지 문제는 민중운동의 논란과 갈등을 더욱 증폭시켰다. 통합진보당은 13석의 의석을 확보했지만 울산-창원-거제 노동벨트의 패배, 노동의제의 실종, 민주노총과 민주통합당 간의 정책협약-선거 지지로 노동자정치는 사실상 사라졌다.

이번 총선에서 확인된 바, 올 대선은 초박빙 승부가 예상된다. 여대야소 국회가 등장함에 따라 대선 승리에 대한 압박은 더욱 커져, 모든 것이 대선승리의 블랙홀로 빨려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민중운동 다수가 우경화하는 가운데, 야권연대에서 이른바 ‘연립정부수립’ 전략으로 노동자정치의 미래는 더욱 불투명해질 것이다. 민주노조운동의 전통과 원칙을 지키고자 하는 노동자운동 주체들의 정치적·이념적 활로를 도모해야 할 때다.

I 19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1 투표율

- 19대 총선 투표율은 54.3%로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 투표율 54.5%와 비슷한 수치를 기록. 이는 18대 총선 투표율 46.1%에 비해 8.2% 포인트 높아진 수치지만, 57.2%를 기록한 지난 16대 총선에 비해서는 2.9% 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역대 총선 중 두 번째로 낮은 투표율임.

[표1] 최근 선거 투표율 (%)

2004년 17대 총선	2008년 18대 총선	2010년 6.2 지방선거	2012년 19대 총선
60.60	46.10	54.50	54.30

- 이번 총선은 2010년 6.2 지방선거와 2011년 오세훈 서울시장 사퇴를 거치며 이명박 정부 심판론이 더욱 힘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치러짐. 범야권은 2004년의 높은 투표율을 재연하고자 했음. 그러나 민간인 사찰, 김용민 막말 논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선거공간에서 상호비방 이상의 의미를 발견하기 어려웠고, 이외에도 각종 폭로전 중심으로 선거가 전개되어 정치에 대한 불신과 혐오감으로 심화시킨 것으로 평가.

[표2] 18대, 19대 총선 세대 별 투표율 (%)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18대 총선	28.1	35.5	47.9	60.3	65.5
19대 총선	45.0	41.8	50.3	64.6	69.7

주1) 19대 총선 세대 별 투표율은 출구조사 결과

[표3] 19대 총선 연령대별 지지율 (%)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새누리당	30.4	26.2	33.6	49.9	60.3
통합민주당	47.9	53.5	46.1	32.4	24.8

주1) 19대 총선 세대 별 투표율은 출구조사 결과

- 한편, 출구조사 결과 연령별 전국 투표율에서 20대 투표율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서울에서 20대 투표율은 64.1%로 나타남. 이는 촛불집회, SNS, 나꼼수, 유명인사들의 투표독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임.

② 정당 별 의석수

[표4] 18대, 19대 총선 정당 별 의석수

18대 총선				19대 총선			
구 분	계	지역	비례	구 분	계	지역	비례
한나라당	153	131	22	새누리당	152	127	25
친박연대	14	6	8	-	-	-	-
통합민주당	81	66	15	민주통합당	127	106	21
자유선진당	18	14	4	자유선진당	5	3	2
민주노동당	5	2	3	통합진보당	13	7	6
창조한국당	3	1	2	창조한국당	-	-	-
진보신당	-	-	-	진보신당	-	-	-
무소속	25	25	-	무소속	3	3	-

[표5] 18대, 19대 총선 시·도별 의석수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자유선진당		무소속	
	18대	19대	18대	19대	18대	19대	18대	19대	18대	19대
서울	40	16	7	30	-	2	-	-	-	-
인천	9	6	2	6	-	-	-	-	1	-
경기	32	21	17	29	-	2	-	-	1	-
강원	3	9	2	-	-	-	-	-	3	-
대전	-	3	1	3	-	-	5	-	-	-
충남	-	4	1	3	-	-	8	3	1	-
충북	1	5	6	3	-	-	1	-	-	-
세종	-	-	-	1	-	-	-	-	-	-
경북	9	15	-	-	-	-	-	-	5	-
대구	8	12	-	-	-	-	-	-	1	-
부산	11	16	1	2	-	-	-	-	5	-
울산	5	6	-	-	-	-	-	-	1	-
경남	13	14	1	1	2	-	-	-	1	1
전북	-	-	9	9	-	1	-	-	2	1
광주	-	-	7	6	-	1	-	-	1	1
전남	-	-	9	10	-	1	-	-	3	-
제주	-	-	3	3	-	-	-	-	-	-
계	131	127	66	106	2	7	14	3	25	3

주1) 새누리당은 18대 총선 한나라당과 비교 (친박연대는 경기1, 부산1, 대구3, 경북1)

주2) 민주통합당은 18대 총선 통합민주당과 비교

주3) 통합진보당은 18대 총선 민주노동당과 비교

- 새누리당은 원내 제1당 지위를 지켜낸 것은 물론 단독과반을 차지. 새누리당은 강원을 석권하고, 충청권 제1당을 차지함으로써 서울에서의 패배를 만회. 특히 강원도는 이광재, 최문순 지사가 연이어 당선됨으로써 '야도'라 불리기도 했다는 점에서 민주통합당으로서는 의외의 결과였음. 강원의 경우 18대 총선 때 3석을 얻는데 그쳤으나 이번에는 9곳 전부에서 1위에 오름. 충청에서 한나라당은 17·18대 총선에서 각각 1석을 얻는 데 그쳤으나 이번 총선에서는 9석을 확보.
- 반대로, 민주통합당은 원내 제1당을 노렸으나 이는 물론이고 여소야대 국회 조성에도

실패했음. 강원, 충청에서 패배했을뿐 아니라, 대통령 선거를 앞둔 포석이었던 낙동강 벨트 대결에서도 대부분 낙선함. 서울·경기·인천에서 얻은 65석도 2008년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얻은 의석수 81석과 비교하면 저조한 수치.

- 통합진보당은 원내교섭단체 구성(20석)을 목표로 했으나 13석을 얻는데 그침. 이는 2004년 민주노동당이 얻은 10석 보다 많은 의석수이지만, 야권연대 효과를 크게 누렸다고 보기는 어려운 수치. 또한 2004년 민주노동당(지역2, 정당지지율 13.0%)과 비교할 때 지역구 의원이 증가하고 정당지지율이 감소(지역7, 정당지지율 10.3%)했음. 그리고 수도권과 호남에서 지역구 의원을 배출한 반면, 울산, 창원 등 민주노동당의 전통적 지지기반을 잃었다는 점 역시 특징. 여소야대 국회조성이 실패함에 따라 캐스팅보트를 쥐고자 한 목표도 무위로 돌아감.

- 진보신당은 10대 핵심정책으로 탈핵, 탈삼성, 탈비정규직, 탈학벌, 탈FTA,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나누기, 부자증세와 불로소득 중과세, 모든 국민에게 집을, 보편복지 실현, 토건사업 재발 방지 등을 제시. '진짜 진보'를 표방하며 통합진보당과의 차별화를 시도. 선거 과정에서 비례1번 김순자 후보의 진정성과 헌신성이 부각되었고, 봉준호 등 유명인사들의 지지선언이 이어졌으나, 이는 사전에 기획된 전략은 아니었음. 또한 노동자 1만 명으로부터 정당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3월 28일부터 시작된 노동자 선거대책본부 사업 역시 매우 뒤늦게 기획된 것이었음. 진보신당은 정당지지율 1.11%를 얻었으며, 지지율 2%에 이르지 못함에 따라 정당법에 따라 등록 취소됨. 진보신당은 '진보신당 창당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향후 제2창당에 나설 예정임.

- 정당지지율에서는 새누리당 42.80%, 민주통합당 36.45%, 통합진보당 10.30%, 자유선진당 3.23%로 집계되었으며, 여권과 야권을 비교하면 야권이 소폭 앞서는 것으로 나타남.

[표6] 영남, 호남 의석수

	18대 총선		19대 총선	
	한나라당 +친박연대	통합민주당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영남	51	2	63	3
호남	0	25	0	28

[표7] 70% 이상 몰표 지역구

	18대 총선		19대 총선	
	한나라당	통합민주당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영남	9	0	5	0
호남	0	10	0	5

주1) 18대 총선 한나라당 몰표 대구 5곳(동구갑, 동구을, 북구을, 수성구갑, 달성군), 경북 3곳(구미시갑, 영천시, 경산시 청도군), 경남 1곳(마산시갑).

주2) 18대 총선 통합민주당 몰표 지역은 광주 5곳(동구, 서구갑, 서구을, 북구을, 광산구을), 전남 5곳(여수시갑, 여수시 을, 순천시, 나주시회순군, 담양군곡성군구례군).

주3) 19대 총선 새누리당 몰표 지역은 대구 1곳(달서구), 경북 4곳(포항시 북구, 김천, 안동, 군위군의성군청송군).

주4) 19대 총선 민주통합당 몰표 지역은 광주 1곳(광산구을), 전북 1곳(익산시갑), 전남3곳(목포, 여수시을, 담양군합평군 영광군장성군).

- 지역주의는 여전히 강고하나, 영남과 호남에서 70% 대 이상의 몰표는 줄었다는 점에서 부분적으로 완화되는 양상을 동시에 보임. 영남지역 의석(67석)이 호남(30석) 보다 37석이나 많아 여야 간 박빙 상황에서는 새누리당이 30석 차로 승리한다는 통설이 재확인됨.

③ 노동조합 후보 및 지지후보 당선 현황

[표8] 노동조합 후보 및 노동조합 지지후보 당선 현황

구 분	계	당선자
민주노총 후보 (조합원)	5명	정진후(비례, 전교조), 김선동(전남순천, 플랜트건설노조), 심상정(경기 고양덕양갑, 금속노조), 이상규(서울관악을, 건설노조), 김미희(경기 성남중원, 건설노조)
민주노총 지지후보 (비조합원)	3명	오병윤(광주 서구을), 노회찬(서울 노원병), 강동원(전북남원·순창)
한국노총	5명	김경협(부천원미갑, 전 부천지부 의장), 김영주(서울 영등포갑, 전 금융노련 상임부위원장), 김동철(광주 광산갑, 전 금융노련 산업은행노조), 한정애(비례, 전 대외협력본부장), 김기준(비례, 전 금융노조 위원장)

- 민주노총 후보 및 지지후보 60명 가운데 8명이 당선됨. 민주노총은 “노동자 밀집지역이라는 울산과 창원에서 패배한 것은 진보정치가 노동자들의 마음을 얻지 못했다는 점에서 뼈아프게 돌아봐야 한다”며 “민주노총[의 통합진보당] 비례후보 집중투표 결과가 10.3%로 6석에 그쳤다는 점도 애석하다”고 평가.

- 한국노총은 과거 2008년 총선에서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 결과로 한국노총 출신 인사 4명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바 있음. 이번 총선에서는 민주통합당 창당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5명의 국회의원이 당선됨. 한편, 한국노총 출신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서울 강서에서 재선했고, 최봉홍 항운노련 위원장은 새누리당 비례후보로 국회의원에 당선됨.

① 새누리당 압승의 원인

○ 출발부터 삐걱 거린 민주통합당과 야권연대: 누더기 공천과 말바꾸기 논란

- 민주통합당이 주도하는 반MB 야권연대는 무상급식 주민투표 무산,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 안철수 돌풍, 한미 FTA 반대 촛불집회 등으로 이어지는 상승세에 있었음. 연초에만 해도 민주통합당의 단독 과반, 또는 적어도 민주통합당 제1당 및 야권연대의 과반 의석 확보가 예상되었음.

-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MB심판론을 전면적으로 제기하면서, 한미FTA, 4대강, 언론통제, 제주해군기지 등의 현안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한편, 보편적 복지, 경제민주화, 재벌개혁, 중소기업 보호 등을 대안으로 제시함.

- 게다가 민주통합당은 창당과정에 한국노총이 참여함으로써 형식적이라 할지라도 노동자 대중조직의 기반을 확보함. 2월 28일 민주통합당과 한국노총은 '28대 노동정책 과제'를 발표. 또한 민주노총과도 정책협약을 체결. 이로써 형식적이거나 사상 최초로 양대노총의 지지와 지원을 받는 정당이 되었으며, 노동계의 노동의제를 대폭 수용함으로써 친서민·친노동자 이미지를 획득하고자 노력함.

- 그러나 민주통합당은 당내 리더쉽 부재와 누더기 공천으로 인해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함. 친 노무현계 독식과 시민통합당 세력에 대한 푸대접으로 인한 계파 간 갈등, 친FTA 논란, 도덕성 논란과 호남 반발 등 민주통합당은 공천 과정에서 내상을 입음. 2월 21일 박영선 최고위원은 “검찰개혁과 재벌개혁을 위해 영입한 외부인사들이 이번 공천에서 모두 낙천”되었다며 최고위원직 사퇴.

- 또한 2월 22일 이명박 대통령이 노무현 정부 시절 한명숙, 이해찬, 유시민 등이 한미 FTA와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매우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지지”했었다며 야당의 말바꾸기를 비판함. 이에 민주통합당은 “선거 중립 의무를 진 대통령의 노골적인 선거개입”이라고 대응할 수밖에 없었음. 누더기 공천과 말바꾸기 논란은 진보적 성향의 지지자들이 민주통합당 지지층에서 이탈하는 계기가 됨.

○ 반면, 새누리당은 이념적 중도주의화와 확고한 리더쉽 구축

- 반면 한나라당은 연초 ‘총선에서 100석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올 정도로 MB 심판론으로부터 타격을 받음. 이에 2월 13일 한나라당은 새누리당으로 간판을 교체하고 박근혜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쇄신에 돌입.

- 새누리당은 이념적 중도주의화와 인적쇄신 등을 통해 이명박 정부와의 차별화에 일정 부분 성공함. 정강정책에 복지와 경제민주화를 명시하고, 친이계와 현직의원들을 물갈이했으며, 이 과정에서 박근혜를 중심으로 한 당내 리더쉽을 확고히 구축함. 공천에서 탈락

한 친이계나 비박계 의원 일부가 집단행동 조짐을 보였으나, 박근혜 비대위는 사태를 조기에 수습. 공천탈락자들이 연이어 탈당을 포기하고 총선 불출마를 선언함에 따라, 민주통합당과 달리 공천잡음을 최소화함.

- 나아가 야권에 대한 공세 수위를 점차 높여나감. 4월 3일 박근혜 선대위원장은 “야당은 자신들이 국익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스스로 추진했던 한미FTA도 야당이 되니까 폐기하겠다고 하고, 국가 안보를 위해 꼭 해야 할 일이라고 스스로 시작했던 제주해군기지 건설도 중지해야 된다고 말을 바꾸고 있다”며 야권의 말바꾸기 시리즈를 강도 높게 비판하여 여론 주도권을 확보.

○ ‘사찰 vs 막말 논란’으로 사실상 전세역전

- 선거운동 돌입 후 여론조사 결과는 대체로 야권의 약간 우세나 박빙을 전망.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민간인 사찰 카드로 승부수를 던짐. 그러나 청와대는 불법사찰의 80% 이상이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이루어졌다고 맞대응하고 새누리당은 이에 동조하며 쟁점 물타기에 일정하게 성공함.

- 또한 박근혜 선대위원장은 “불법사찰 문제는 특검에 맡겨두고 정치권은 민생을 살리는데 집중해야”한다며 폭로전 양상의 선거구도에서 합리적 태도를 취함과 동시에 이명박 정부와도 거리를 둠. 그리고 보수언론을 통해 김용민 막말 논란이 불거지자 새누리당은 ‘이런 세력이 다수당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논리를 동원해 보수세력 결집을 도모.

- 반면 민주통합당과 범야권은 김용민 사퇴론과 옹호론이 정리되지 못한 상태에서, 어쨌든 새누리당 재집권은 안 된다는 주장만을 되풀이하며 약한 리더쉽과 무능력한 대응을 보임.

○ 새누리당 승리의 원인

- 첫째, 김대중-노무현 집권세력의 말바꾸기가 야권연대 내에서는 통했지만 대중적으로는 통하지 않았음.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의 통합, 그리고 민주통합당과의 연대를 통해 이루어진 야권연대는 그 출발부터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음. 민중운동 내에서도 신자유주의 세력과의 통합·연합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으나, 민중운동 다수파는 이들이 과거 정책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정당통합과 무원칙한 야권연대를 강행. 그러나 이러한 약점은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에게 좋은 빌미가 되었고, ‘묻지마 반MB’의 상승세는 꺾일 수 밖에 없었음.

- 둘째, 새누리당은 중도보수화로 쇄신함으로써 이명박 정부와의 거리를 두는데 성공함. 복지, 경제민주화를 내세운 것은 물론이고, 안보정책도 ‘평화 지향적 균형 외교’와 ‘유연한 대북정책’으로 변경. 이에 따라 민주통합당과 정책적으로 일정하게 수렴하는 양상을 보임. 야권은 반MB를 통해 박근혜의 새누리당을 공격하고자 했으나, 선거 결과가 말해주듯 이러한 전략은 실패한 것으로 보임.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반MB 경쟁에서조차 민주통합당에게 승리했다고 할 수도 있음.

- 셋째, 이번 총선은 대선 전초전이었던다는 점에서 회고적 성격과 동시에 전망적 성격도

가지고 있었음. 야권연대는 누더기 공천 논란과 말바꾸기 비판에 직면하고, 김용민 막말 논란에 휩싸이는 등 대안적 세력으로 인식되지 못함. 그 이전까지 야권의 진보적 색채를 상징한 보편적 복지, 경제민주화, 노동의제 등도 선거 본선에 돌입한 뒤로는 상당히 주변화되고 오히려 민간인 사찰이라는 지엽적 문제를 전술적으로 강조. 게다가 새누리당의 중도주의화로 인한 일정한 정책적 수렴 상황에서 대안의 차별성을 형성하는 데에도 실패함.¹⁾

- 결국, 집권을 위해 말바꾸기를 반복해온 신자유주의 세력과 민중운동 일부가 연합한 '물지마 반MB 야권연대'는 대안적 세력으로 인정받는데 실패했음. 또한 반MB의 실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음.

㉒ 야권연대 만능론이 민중운동에 남긴 깊은 상처

○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 통합 시도는 민중운동 내 논란과 갈등을 불러일으킴

- 2011년 민주노동당이 국민참여당과의 통합을 추진하자, 민중운동 내 많은 논란과 갈등이 발생. 국민참여당은 참여정부 시절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한 당사자이기 때문. 이에 한미 FTA를 체결하고 비정규직법을 개악했으며,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필수공익사업장 파업권 제한을 골자로 하는 '노사관계 로드맵'을 만든 국민참여당은 노동자정당도 아니고 진보정당도 아니라는 비판이 제기됨.²⁾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 민주노동당 당권파는 야권연대를 통해 연립정부를 수립한다는 주류화 전략을 무리하게 감행하고, 결국 신자유주의 세력과의 연합정당 창당을 주도.

- 그러나 통합과정에서 국민참여당은 '재벌해체, 무상의료, 무상교육 등 정책은 시민들의 보편적 정서와 상충하고, 노동정책을 앞세우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등의 입장을 피력함. 그 결과 통합진보당은 5대 비전으로 △나라의 주권 확립 △복지국가 건설 △한반도 평화와 통일 지향 △녹색생태 사회 건설 △한국정치 개혁 등 대단히 절충적이고 모호한 내용을 발표.

- 국민참여당과의 통합은 민주노동당 자신은 물론 이들로 표상되던 민중운동 주류의 대대적인 노선 전환을 상징하는 사건임. 즉, 자유주의 세력과 이념적·조직적으로 분별 정립하려던 진보정당 및 정치세력화 운동의 쇠퇴를 상징하는 극적인 계기임. 통합진보당의 성격은 '친노동자적 자유주의 정당'으로 볼 수 있음.

1) 물론 복지 논쟁은 노동유연화와 결합된 '유연안정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고, 경제민주화 논쟁은 수출-재벌 중심의 세계화 전략에서 유독 재벌의 경제력 집중만을 별도로 분리하여 다룸으로써 근본적 한계를 가지는 것이었음.

2) 3자통합당 배타적 지지반대와 올바른 노동자계급정치 실현을 위한 민주노총 조합원 선언운동본부(<http://cafe.naver.com/sunun2012>)

○ 민주노총의 통합진보당에 대한 지지 문제는 논란과 갈등을 더욱 증폭시킴.

- 민주노총의 통합진보당에 대한 지지 문제는 민중운동 내 논란과 갈등을 더욱 증폭시킴. 민주노총 집행부는 2012년 1월 31일 대의원대회에서 의회권력 교체(여소야대)와 진보정당의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목표로 하는 총선방침(안)을 제시함. 이 안은 통합진보당은 물론이고 민주통합당과의 전면적 선거연합을 전제하는 안이었고, 따라서 민주노총이 노동유연화와 노조탄압을 일삼아온 신자유주의 세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다는 안이었음.³⁾

- 이와 같은 우려에 따라 <3자통합당 배타적 지지반대와 올바른 노동자계급정치 실현을 위한 민주노총 조합원 선언운동 본부>가 결성되어 민주노총의 총선방침(안)을 바로잡고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원칙을 다시 세우자는 입장을 표명. 그러나 민주노총 대의원대회가 정족수 미달로 유회되고 이후 개최된 임시대의원대회 역시 정족수 미달로 무산됨. 이후 민주노총은 총선방침(안)에 입각하여 지역에서 야권단일후보를 지지하고, 통합진보당으로 비례후보 투표를 집중하는 활동 전개.

- 민주노총의 총선방침에 대한 우려는 총선 과정에서 현실화됨. 야권연대를 지지함으로써 선거 공간에서 노동 의제를 전면화한다는 민주노총 집행부의 의도와는 달리, 노동 의제가 역으로 야권연대에 종속되는 결과를 초래. 이에 따라 민주노총의 요구안은 끊임없이 희석되고 변질됨.

- 예를 들어, 파견노동에 대해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3월10일 합의된 <범야권공동정책합의문>에서 ‘불법파견 금지’라고만 언급하고 있음. 이는 파견법 폐지가 아니라 파견법의 부분적 개정 입장을 가진 민주통합당의 입장이 반영된 대신, 민주노총의 파견법 폐지 입장을 수용한 통합진보당의 입장은 변질된 것임. 이 외에도 양당은 ‘한미 FTA 폐기’가 아니라 ‘이명박 정권이 체결한 한미 FTA의 반대’로 합의하는 등 민중운동의 요구는 야권연대의 틀 속에서 통합진보당에 의해 자체 검열되거나 야권연대 과정에서 희석되었음.

○ 만병통치약으로 제시된 ‘여소야대’ 실패와 민중운동 투쟁동력 유실

- 숱한 논란과 갈등에도 불구하고 민중운동 다수파는 선거만 이기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야권연대를 추진함. 이에 따라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내 비판적 의견은 묵살되었

3)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 간 무리한 통합은 농민운동 내에서도 논란과 갈등을 양산.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은 지난 2월 23일 대의원대회를 열고 지도부를 선출했으나, 찬반투표에서 110명의 대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짐. 이에 앞서 2월 8일 대의원대회에서는 지도부 선출에 대한 안건이 다뤄지지 못하고, 대의원 정족수 미달로 유회되기도 했음. 대의원대회를 앞두고 강기갑 당대표 비서실장을 지낸 바 있는 박용두 전남 곡성군 농민회장의 명의로 전농 홈페이지 게시판에 작성된 토론제안서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음. ‘임시의원대회 일정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음에도 누구도 속 시원하게 이유를 말하지 않고 누구도 공개적으로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는 그야말로 이상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 변화를 선도하지 못하고 정체된 농민운동 △ 현장조직의 약화로 민주적 의사결정의 부재 △ 정치세력화에 대한 대중적 평가미비 △ 진보통합과정에서의 난맥상’ 등 이라고 지적하면서, ‘통합진보당의 5대 핵심정책과제에서 농업정책의 누락, 당 정책연구소의 농업정책연구원 배제, 농민국장의 교체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한 전농의 대응미비 등이 겹치면서 사실상 14기 지도부 후보에 대한 불신임 성격의 지도부 선출 무산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월간 노동세상》, ‘민주노총, 전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나’)

고, 한미 FTA 폐기 촛불집회도 야권연대를 응원하는 장으로 변질되었으며, 민주노총은 여소야대 국회를 전제로 상층 정책협약과 선거지원에만 주력할 뿐 노동자투쟁을 조직하는 활동은 상대화함.

- 모든 역량을 집중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여소야대가 실패하자 통합진보당은 “야권연대가 적지 않은 잡음이 있는 상황에서도 수도권에선 단일 후보들을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도와줬다”며 “야권연대를 향한 민심이 확인된 선거”라고 자평. 그러나 서울 수도권에서의 결과는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얻은 성과와 비교해볼 때 대단한 것이 아님. 정권 말기 황혼 선거가 일반적으로 야당에게 유리한 점을 고려한다면, 야권연대를 향한 민심이 확인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결과. 또한 야권연대를 하지 않았던 2004년 민주노동당과 비교할 때, 이번 총선 결과는 구 민주노동당 당권과와 심상정, 노회찬 후보에게는 승리일 수는 있어도, 국민참여당과의 합당과 민주통합당과의 선거연합까지 더해진 야권연대 효과로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는 수준임.

- 중요하게 평가해야할 점은 이 과정에서 민중운동의 투쟁동력이 유실되었다는 점임. 한미 FTA 투쟁, 제주해군기지 반대 투쟁, 정리하고 비정규직 철폐 투쟁은 여소야대만 이루어지면 손쉽게 해결될 것처럼 이야기되었고, 이 과정에서 노동자 민중의 투쟁을 통한 역량확보는 상대화되었음.

- 민중운동의 투쟁 역량이 유실됨과 동시에, 민중운동 전반이 선거국면에서 이익집단화되는 경향도 심화되었음. 야권이 다수의석을 차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노동자, 농민, 빈민, 대학생 등 대중조직이 정당과 정책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주된 활동 양태로 자리잡았음. 물론 대중조직이 스스로의 투쟁역량을 강화해나가면서 정당을 압박하는 전술을 활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님. 다만, 주객이 전도되어 대중운동의 원칙과 기반을 스스로 잠식하는 활동이 문제. 또한 사회의 총체적 변화를 추구하는 보편적 요구보다는 부문별 특수이익을 위한 요구가 중심에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었음. 나아가 <총선유권자네트워

[참고1] 정책협약을 중심에 둔 운동의 한계

- 정책협약 중심의 활동은 입법적, 정치적, 행정적 타협과정을 중심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운동의 주체적 발전전략이 아님.
- 내용적으로 경제민주화, 재벌개혁, 사회복지확충⁴⁾, 비정규직 차별해소라는 자유주의적 합의수준을 넘기 어려움.
- 그리고 행정적, 입법적 논의 절차에 의해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합의수준 하향화, 내용왜곡, 합의좌절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⁵⁾

양당협의기구(사회적 합의기구) 내의 공방 → 정부기구의 독단적 정책결정 → 대중운동의 비판과 압력, 사회적 합의기구의 타협안 제시 → 정부정책 결정 및 공식 입법 추진 과정에서 의제의 변질 → 목표의 변질과 실망으로 인한 대중조직의 분열과 우경화 심화

4) 새누리당의 복지 프로그램은 연 11조원 규모이고, 민주통합당의 복지 프로그램이 연 32조원, 통

크>와 같이 부문별 특수이익을 종합하고 조정하여 로비하는데 주력하는 연대 아닌 연대 활동이 강화되었음. ([참고1])

- 이와 같은 조건 속에서 또 다시 대선까지 ‘묻지마 야권연대’가 지속되고 민중운동의 투쟁동력 유실이 반복된다면, 대선 결과를 떠나 민중운동의 정체성과 기반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귀결될 것임.

- 한편 민주노총은 1월 31일 정기대의원대회를 통해 8월말 총파업을 결의하고, 19대 국회가 처음 열리는 6월에 철도와 금속이 파업을 준비 중임. 문제는 이 투쟁계획들이 실은 야소야대가 성사될 것을 대전제로 수립된 계획이라는 점. 민주노총이 장외 투쟁을 동원하면, 6월 2일 개최되는 임시국회와 9월 정기국회에서 비정규법, 노조법, 최저임금법, 파견법 등 노동관련 법과 제도를 어떻게든 개정할 것을 시도하고, 이 기세를 몰아 대선에서의 정권교체로 노동악법 개폐투쟁을 최종 승리로 이끌어간다는 의도였음. 여소야대 국회 구성이 실패한 현 시점에서, 이대로라면 8월 투쟁은 아무런 실질적인 성과 없이 모든 과제를 다시 대선으로 떠넘길 위험이 커짐. 국회 다수의석이 안되니 정권을 바꿔 노동법을 개정하자는 논리. 민중운동은 자기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보다 진정성 있는 투쟁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나아가 투쟁 속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야 함.

○ 게다가, 통합진보당은 총선을 계기로 진보적 가치 크게 퇴색시킴으로써 민중운동 전반의 정당성과 도덕성을 실추시킴

- 통합진보당은 성폭력 사건 2차 가해자들에 대한 징계 수준을 낮춰 크게 논란을 빚은 정진후 전 전교조 위원장을 비례대표 4번으로 공천. 이에 대해 피해자 지지모임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된 상황에서 이정희 대표는 오히려 정진후 전 위원장을 옹호하는 입장을 발표함에 따라 통합진보당의 정체성과 가치에 대한 불신을 초래.

- 또한 관악을 야권단일화 경선에서 이정희 캠프에서 여론조사 조작을 의도한 문자를 전송한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도덕성에도 타격을 입음. 이정희 대표의 사퇴불가 입장이나 야권인사들의 이정희 옹호론은 도덕성에 대한 이중잣대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음. 결국 문자 메시지 논란이 타 지역 경선불복 사태로 확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경기동부’로 논란이 확산되면서, 이를 봉합하는 차원에서 이정희 대표는 사퇴하고 이상규 전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위원장으로 후보 교체.

- 이 외에도 통합진보당 강병기 후보(경북 진주을)가 새누리당에서 공천을 받지 못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강갑중 후보와 단일화 경선을 진행하는 등 득표 전략 외에 원칙, 기준이 실종된 사례가 발생.

합진보당이 연 63조원 규모로 제시됨. 자원 조성 방식에 대해, 새누리당은 증세 없는 복지확충 계획이고, 민주통합당은 1% 부가증세와 재벌과 대기업 증세를 통해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계획. 통합진보당의 경우에는 고소득자 중심의 소득세율 인상과 법인세 인상, 증부세 강화, 자본 이득에 대한 과세를, 진보신당의 경우에는 통합진보당이 내놓은 소득세율인상 및 법인세, 증부세, 자본이득세에 덧붙여 종교인에 대한 과세 방안까지 포괄하여 연 50조원 규모의 증세 방안을 내놓고 있음.

5)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기, 노동법 개악 과정은 《사회화와노동 제559호》, ‘야권연대를 통한 노동법 개정, 과연 실현될 것인가?’를 참고.

○ 진보신당은 야권연대와 좌파결집 사이에서 어느 전략도 분명하게 선택하지 못한 채로 등록 취소됨

- 진보신당은 야권연대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대부분의 비판은 양당 간 연대가 진보신당을 소외시켰다는 점에 집중. 계급적인 관점에서의 야권연대 비판이 아니라 배제당한 소수정당의 입장에서 제기하는 양당연대 비판을 제기함. 진보신당은 결국 야권연대에 대한 명확한 방침을 수립하지 못한 채 지역별로 개별 대응함. 원칙과 실리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다가 다 놓친 형국.

- 거제에서는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진보신당 3당 단일화가 성사되어 진보신당 김한주 후보가 선출되었으나, 인접지역인 창원에서는 통합진보당 손석형 후보의 도의원사퇴 문제로 인해 단일화 논의가 파행을 빚음. 진보신당 김창근후보는 박훈 무소속 후보와 따로 후보단일화 경선을 치루고, 통합진보당 손석형 후보는 민주통합당과 경선을 치뤄 단일화함. 이후 통합진보당은 구 국민참여당 측 반대로 거제에서 김한주 진보신당 후보를 제대로 지원하지도 않았고, 창원에서는 권영길 의원까지 나서 통합진보당 손석형 후보를 일방적으로 지지하고 나섬. 개표 결과 거제와 창원에서 모두 새누리당이 당선됨. 이에 따라 거제, 창원 선거 평가를 둘러싸고 통합진보당과 진보신당 간에 책임공방이 불가피한 상황.

- 문제는 진보신당이 전국적 야권 후보조정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오히려 소수정당으로서 자기 정체성과 야권연대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바탕으로 전국적으로 좀 더 원칙적이고 통일적으로 대응했어야 한다는 평가를 남겨야 할 것임⁶⁾. 왜냐하면 총선 전 이미 민중운동 다수파의 야권연대-연립정부 구상에 대한 비판적 견해가 제시된 상황에서 총대선 이후 민중운동 질서재편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기 때문. 거의 유일하게 지역구 당선가능성이 있었던 거제에서의 야권단일화 역시 통합진보당측이 사실상 불복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전혀 못 거둔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음. 총선 종료 후 스스로 밝혔듯 진보신당의 “실질적인 재창당은 진보좌파세력의 규합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었다면 이 전략을 보다 분명히 한 선거 전략이 필요했음.

- 탈탈탈 선거정책(전략)은 너무 급조됨. 원칙적인 노동자운동과의 결합보다는 새로운 경쟁에 골몰한 인상을 지울 수 없고, 실제 선거과정에서 제대로 부각되지도 않음. 뒤늦게 비례대표 1번 김순자 후보는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정진우 후보의 거리투쟁 선거활동이 오히려 신선한 관심을 집중시킴. 하지만 너무 뒤늦어 선거막판에 시작된 좌파 결집의 기운을 이어가지 못했음.

6) 한편 진보신당 동대문구 당협에서는 진보신당의 고현종 예비후보(당협위원장)가 중앙당 및 서울시당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민주통합당 후보 선거지지운동을 벌여, 시당의 징계를 받는 일도 있었음. 이때 고현종 당협위원장은 거제에서는 야권연대하고 동대문에서는 왜 안 되냐며 항변하였음.

③ 민주노총과 노동자운동의 존재감 상실

○ 민주노총은 최초로 민주통합당과도 정책협약을 체결

- 민주노총은 상층중심의 정책협약을 통해 노동의제를 전면화하는데 주력함. 우선, 민주노총은 ‘10대 우선입법과제’와 ‘10대 요구 78대 과제’를 제시하고 3월 6일에는 통합진보당과, 3월 16일에는 진보신당과 협약을 체결함. 양당은 10대 우선입법과제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이후에도 ‘10대 요구 78대 과제’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동일한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함.

- 총선 직전인 4월 8일, 민주노총은 사상 처음으로 민주통합당과도 정책협약을 체결. 그러나 통합진보당, 진보신당과 체결한 정책협약과는 달리 민주통합당이 민주노총의 요구안을 받아들이기 보다는, 역으로 민주노총이 민주통합당의 노동정책을 지지하는 내용으로 구성됨. 협약서에서 “민주노총은 민주통합당이 제19대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입각한 비정규직의 차별 철폐와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의 현실화와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정리해고 요건 강화와 노동기본권 신장을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 공공부문 노사관계 자율성 강화와 고용친화적 공공부문 개혁,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통한 경제민주화 실현 등 노동 공약과 일자리 창출 정책의 실현을 위해 적극 협력한다”고 서약. ([참고2])

- 또한 “제19대 국회에서 민주진보 진영의 원내 제1당 의석 확보 및 교섭단체 구성 등 안정적인 의회 내 절대다수 의석 확보를 담보하는 총선 승리를 위해 적극 협력”한다며, 민주노총이 민주통합당의 당선을 위해 노력한다는 점도 명시. 이번 정책협약은 역대 정부의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에 맞서 투쟁해온 민주노총이 최초로 이들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는 점에서 노동자운동의 우경화를 상징.

- 이상의 정책협약을 제외하면 민주노총은 총선에서 존재감을 크게 상실함. 선거운동 기간 중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었으며, 이 외에도 유성기업, 한일병원 등 노동자투쟁은 지속적으로 표출되었음. 그러나 민주노총은 이러한 현안들을 정치쟁점화하고, 투쟁 주체를 결집·확대해내는 활동을 해내지 못함.

- 총선을 앞두고 노동자민중운동 좌파는 <비정규직과 정리해고 없는 99%의 희망광장> (희망광장)에 적극 결합하여, 노동자 대중투쟁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함. 이는 2011년 정리해고 문제를 사회적 의제로 만들어낸 희망버스와 쌍용자동차 희망텐트를 계승하는 기획이었음. 이를 통해 총선시기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문제를 부각시켜, 총선 이후 본격적인 의제로 다뤄지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했음. 이는 분명 의미있는 시도였으나, 상황을 역전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음.

7) △파견법 폐지 △노동시간단축, 일자리 창출 특별법 제정 △근로기준법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 △기간제법 개정 △최저임금법 개정 △고용보험법 개정 △하도급법 및 공정거래법 개정 △정치자금법 개정 △공공기관운영법 개정

[참고2] 민주통합당 - 민주노총 정책협약

정책협약서

1. 올바른 노동문제 해결과 사회민주화 실현을 위한 정책협의 기구를 구성한다.

민주통합당은 민주노총이 제안한 '99%가 함께 사는 사회를 위한' 노동-사회 대개혁 요구안의 문제 인식과 기본 취지에 공감하며 노동존중사회를 향한 민주노총의 변함없는 노력과 열정을 존중하여 올바른 노동문제 해결과 사회민주화 실현을 위한 정책 과제와 우선 입법안의 조속한 이행을 협의하는 공동 논의기구를 구성한다.

2. 성, 소득, 지역, 장애에 관계없이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경제민주화·보편적 복지·한반도평화·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지지한다.

민주노총은 민주통합당이 제19대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사람중심·민생중심의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 한반도 평화, 국가균형발전 정책비전에 공감하며, 특히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입각한 비정규직의 차별 철폐와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의 현실화와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정리해고 요건 강화와 노동기본권 신장을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 공공부문 노사관계 자율성 강화와 고용친화적 공공부문 개혁,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통한 경제민주화 실현 등 노동 공약과 일자리 창출 정책의 실현을 위해 적극 협력한다.

3. 제19대 국회에서 민주진보 진영의 원내 제1당 의석 확보 및 교섭단체 구성 등 안정적인 의회 내 절대다수 의석 확보를 담보하는 총선 승리를 위해 적극 협력한다.

우리사회에 만연한 노동문제 해결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구체적인 정책의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민주진보 진영의 의회 내 제1당 의석 확보와 교섭단체 구성 등 안정적인 절대 다수의석 확보가 선결 과제라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를 포함한 노동자의 투표 참여를 적극 보장하는 공동의 노력과 선거 협력을 통해 이명박·새누리당 정권을 심판하여 민주진보 세력이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4. 민주통합당과 민주노총은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협약의 이행을 위해 노력한다.

2012년 4월 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대표하여 강승철 사무총장

민주통합당을 대표하여 박선숙 사무총장

○ 거제-울산-창원 노동벨트에서의 패배

- 노동자운동의 기반이 상대적으로 튼튼하다고 여겨진 울산북구, 거제, 창원에서 통합진보당과 진보신당 후보들은 모두 낙선함. 통합진보당과 진보신당 낙선의 직접적 원인은 대체로 노동자운동 내 선거방침에 대한 이견으로 인한 표 분산으로 설명되고 있음. 구 민주노동당 당권파에 의해 무리하게 국민참여당과의 통합이 이루어지고, 민주노총 집행부 역시 무리하게 야권연대 후보에 대한 지지방침을 결정하면서, 선거방침으로 인해 역으로 노동자운동 내 갈등이 심화되었기 때문.⁸⁾

- 예를 들어, 울산북구 유권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현대자동차 지부에서도 민주노총의 선거방침은 갈등을 불러일으킴. 지난 1월 김광식, 박유기, 윤성근, 이상욱 등 전직 현대차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현대차지부 전현직 임원, 간부, 대의원 239명과 현대차비정규직지회 전현직 간부 45명이 "민주노동당이 노동탄압세력인 국민참여당과 합쳐 급조한 통합진보당을 지지할 수 없다"고 선언한 바 있음. 또 선거 운동 기간에는 현대자동차 현장활동가들을 비롯 울산지역 노동활동가 1,000여 명이 기자회견을 열어 정당투표에서 진보신당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 여기에 더해, 앞서 지적했듯 말바꾸기가 현장노동자에게는 통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정리해고, 비정규직 등 신자유주의 정책에 맞서 투쟁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노동자의 입장에서, 민주노총과 민주통합당의 정책연합이나 통합진보당에 대한 지지방침은 납득하기 어렵고, 적어도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할만한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음. 실제로 2010년 지방선거 울산지역 비례대표 정당투표에서는 민주노동당은 34.7%, 진보신당은 6.2%를 얻었으나, 이번 19대 총선에서 통합진보당은 16.3%, 진보신당 2.0%의 지지를 받는데 그침.

○ 한국노총, MB 지지 정책연대에서 민주통합당과 연합으로

- 한국노총은 2007년 이명박 후보를 정책연대 대상으로 공식선정했고, 2008년 18대 총선에서는 한나라당과 정책연대를 통해 4명의 국회의원 당선. 그러나 2009, 2010년 노동법 개악을 거치며 정부와 한나라당에 대한 조합원 불만이 누적됨에 따라, 한국노총은 2011년 2월 24일 정기대의원대회를 통해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를 공식과기.

- 이후 한국노총은 민주통합당 창당 과정에 직접 참여. 이는 그 이전의 정책연대 보다 높은 수준의 결합이었음. 그 결과 민주통합당 내에는 노동계 지분이 제도적으로 보장됨.⁹⁾

8) 예를 들어, 현대차지부 연합집행부의 한쪽 당사자인 현장조직 금속연대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를 강도높게 비판해왔고, 현대차 현장활동가들을 비롯한 울산지역 노동활동가 1,000여 명은 지난 9월 기자회견을 열어 정당투표는 진보신당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힘. 앞서 1월에는 김광식, 박유기, 윤성근, 이상욱 등 전직 현대차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현대차지부 전현직 임원, 간부, 대의원 239명과 현대차비정규직지회 전현직 간부 45명이 "민주노동당이 노동탄압세력인 국민참여당과 합쳐 급조한 통합진보당을 지지할 수 없다"고 선언. (《참세상》, 노동자 정치 1번지, 울산 새누리 싸슬이...이유는?)

9) 민주통합당은 당헌을 통해서 당 지명직 최고위원 중 한 명을 노동에 우선 배려할 것을 명시. (지명직은 여성, 노동, 지역, 청년을 우선 배려.) 또한 노동부문 당원의 지위와 권리에 대해 특별히 배려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대의원대회와 중앙위원회에 15% 범위 내에서 노동부문을 할당. 민

또한 2월 27일 한국노총은 민주통합당과 함께 ‘28대 노동정책 과제’를 발표함으로써 정책적 측면에서도 노동계 의견이 상당부분 반영함. 이를 통해 한국노총은 단기적으로 2008년의 보다 높은 수준의 성과를 달성하고자 했음.

- 장기적으로는 야권연대를 통한 정권교체를 이루어 연립정부를 구성한 이후, 노동-국가-자본의 새로운 사회적 대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핵심전략으로 삼고 있음.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과 이정식 사무처장 등이 공개적으로 밝힌 계획은 다음과 같음.¹⁰⁾ 우선, ‘노동존중 복지사회’를 기치로 하는 2013년 체제의 핵심은 노사 간의 중앙교섭체계 및 노사정간의 사회적 대화체계 구축. 둘째, 한해 5조6천억 규모의 고용보험을 경총과 한국노총이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이를 노사협력적인 네덜란드식 노사모델의 물질적 토대로 함. 셋째, 민주통합당과의 통합과정에서 만든 전국노동위원회를 기반으로 원내 친노동 그룹을 조직. 넷째, 당면 과제인 노동관계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여, 한국노총 각급조직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기대감을 충족시켜 정치적 동원력을 높여냄. 다섯째, 비정규직, 도시빈민, 청년학생의 요구를 반영하는 지역단위 연대조직체를 만들어 전국노동위원회를 실질적으로 강화. 여섯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통합을 중장기적으로 추진.

- 한국노총은 이번 총선에서 5명이 당선됨으로써 단기적 목표는 달성했다고 볼 수 있으나, 총선에서 여소야대에 실패함에 따라 장기적인 전략적 방향성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할 것으로 보임. 한국노총 내에는 여전히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계파가 존재하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기존 전략이 탄력을 받기는 쉽지 않음.

- 한편, 한명숙 전 대표는 민주노총 이석행 전 위원장과 1,000여 명의 민주노총 조합원의 민주통합당 가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민주통합당의 노동부문이 한국노총 주도로 구성되는 것을 견제하는 태도를 보여왔음. 한명숙 대표 사퇴 후 민주통합당 내에서 노동부문 대표성에 대해 어떤 논의가 진행될지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

④ 여론정치가 지배하는 선거, 그리고 정당의 변모

○ 정당정치의 위기와 나꼼수, 안철수 현상

- 안철수 현상은 좌우를 막론하고 ‘정당’자체가 대중의 불신대상이 되어, 정당에 몸담지 않은 전문가출신 비정치인이 미디어를 통해 기존 정치인들의 인기를 선거에서 압도하는 전형적인 사례임. 일부언론에 따르면 실제로 총선 직후 대선출마 의사를 표명한 안철수

주통합당은 당내 기구에 권한이 대폭 강화된 전국노동위원회를 설치. 전국노동위원회는 노동정책에 관해 심의하고 당에 제안하며, 당 대표는 전국노동위원회의 제안을 국정과 당무에 반영하도록 당헌에 명시.

10) 《레디앙》,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인터뷰 기사(2012년 3월 27일); 이정식, 「‘2013년 체제’와 한국노총의 새로운 정치적 선택」, 『노동사회』 (2012년 3-4월호) 참고.

원장은 정당 조직을 대체할 포럼과 전문가 지지 그룹인 싱크탱크를 만들어 세()를 확장하는 전략으로 이번 대선을 치를 계획(중앙일보 4월16일자). 그는 기회가 닿는 대로 자신이 “어느 진영에도 얽매이지 않을 것”임을 밝히고 있는데 이는 기존 한국 정당정치에 두 가지 페러다임인 지역주의와 진보-보수(혹은 자본-노동)의 대립과 구분을 넘어서겠다는 의미임. 이러한 그의 새로운 정치기획이 한편으로는 기존의 낡은 지역주의로 형해화된 정당정치의 개혁을 실행하는 긍정적인 측면을 지니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제대로 싹도 틔워보기 전에 위기에 빠진 진보적 노동자정치의 발전가능성을 봉쇄하는 중도세력 집권을 위한 포괄적(catch-all) 선거전략 만을 강화할 위험이 매우 큼.

- 한편 이번 총선에서 ‘사찰 vs 막말’이라는 지엽적인 문제가 핵심적 쟁점으로 부상한데에는 득표만을 최우선의 목표로 두고, 적과 아를 구분하며, 적을 비난하고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하는 비생산적 선거구도가 그 배경에 놓여있음.

- 일반적으로 선거에서 득표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서, 선거정치에 폭로전의 성격은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음. 그러나 그 자체가 선거정치의 지배적 요소가 됨에 따라, 정치에 대한 실망과 혐오가 깊어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1,383건이 적발되었고, 금품 및 음식물 제공은 18대 총선에 비해 24%, 비방 및 흑색선전은 172% 증가¹¹⁾한 것으로 나타남.

- 시민단체 출신 박원순의 서울시장 당선, 안철수 현상 등은 기존 정당정치에 대한 실망과 혐오가 반영된 현상이었음. 2011년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도는 2.9%로 나타나, 경찰과 함께 최하위를 차지함. 국회에 대한 낮은 신뢰도는 정당정치에 대한 실망과 혐오를 표현하고, 새로운 인물과 외부영입에 대한 관심을 높임.

- 정당정치의 위기는 정당과 의회에 대한 실망과 혐오뿐만 아니라, ‘현직의 위기’로 드러남. 2012년 나꼼수의 ‘가카’신드롬이 있다면, 2007년에는 ‘놈현’신드롬이 있었음. 놈현 신드롬이 단순히 보수화 현상이 아니었듯이, 가카 신드롬 역시 진보적 사회현상이라고 볼 수 없음.

- 97년 IMF,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두 번의 충격과 장기불황에도 불구하고, 정당들은 이에 대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민중들에게 내뿜만을 강요해왔음. 그 결과 국가기관과 대의제 기구가 민주적 정당성을 잃고, 모든 현직 대통령이 위기에 빠지는 ‘현직의 위기’가 일반화되어 왔음. 이는 현재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에서의 정권교체 상황에서도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현상임.

- 나꼼수 열풍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형성된 대중적 이탈의 결과로 볼 수 있음. 나꼼수 현상은 반정치적 정서가 유행하는 혼란상황이고, 반정치적 정서는 대부분 욕설과 원한의 정치로 이루어짐. 그러나 나꼼수식 정치는 계급정치와 이념정치를 구좌파로 조롱하면서, 계급대중운동을 수동적 투표참여 유권자운동이나 야권연대에 종속된 노동자운동의 우경적

11) 특히, 19대 총선은 비방·흑색선전이 관을 친 선거였음. 충청권에 출마한 C후보는 상대 후보의 자녀가 연간 수천만 원짜리 외국인학교에 다니고 이중국적 소유자라는 허위사실을 문자메시지 등으로 배포했다가 고발되었음. 또 E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나선 F씨는 미혼인 상대 여성 후보에 대해 ‘처녀는 맞는데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처녀! 보건복지부 장관은 (인정하는지) 모르겠어. 검사를 안 해 봐서’라고 발언하여 논란이 됨.

해체 경향을 부추김. 즉, 정치위기의 일부를 이루면서, 위기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함.

○ 여론정치의 전면화와 정당의 변모

- 정치위기로 인해 정치지형은 매우 불안정한 양상을 보이고, 불안정한 정치지형에서 설문조사 기업들이 여론형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행위자로 등장. 여론은 다수 대중의 의견을 의미하므로, 그에 기반을 두고 정치가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할 수 있음. 그러나 현재의 여론정치는 설문조사 기업에 의해 기획된 대중의 수동적 답변을 가공하여 여론조사 기법이라는 사이버 과학을 매개로 여론을 생산해내는 역할을 수행.

- 또 여론정치는 특정 인물에 대한 인기투표 형식으로 진행. 장기적 정책방향과 이념을 대상으로 여론조사가 실시될 때도 있지만 이는 매우 피상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짐. 깊이 있는 숙고, 주체의 성장과 변화를 동반하는 지속적 참여나 사회운동은 인물에 대한 선호조사 과정에 반영되지 않으며 오히려 배제됨. 이에 따라 정치인들이 '나는 가수다'와 같이 인기투표에 따라 하루아침에 흥하고 망하는 불안정한 모습이 더욱 강화됨.

- 이처럼 변화된 지형에 적응하기 위해서 정치인들은 정치이념이나 계급적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운동에 헌신하기 보다는, 언론매체에 노출되는 것에 목을 맬 수밖에 없음. 인기투표 형 정치구도에서 개인의 감동적 스토리텔링, 기존 정치의 형식적 틀 파괴와 같은 부분들이 각광을 받음.(안철수, 문재인, 박근혜 등의 TV 출연) 그리고 이와 같은 미디어활동이 정당활동의 가장 중요한 위치로 재조정됨. 통합진보당의 선거광고 역시 이러한 사례.

- 그리고 정당 내부 조직에서도 여론조사와 여론형성 기능이 전략적 지위를 차지할 만큼 중요해짐. 지지층의 유동성이 높기 때문에 정당은 대중의 선호를 빠르게 파악하고 이를 수용하거나 조작하기 위한 기능을 강화하는 것. 새누리당의 여의도연구소가 대표적임. 민주당도 비슷한 성격의 싱크탱크와 계파별 정치기획사들이 존재함.

한편 이러한 정당 내부조직의 기능변화는 진보정당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 전통적인 민중운동의 정책 단위가 해운 역할은 대중운동의 정치적 이해와 요구를 총화하여, 투쟁전략 전술을 수립하는 것. 하지만 원내진출 이후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은 정책단위들을 대중의 선호에 따른 정당의 반응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변화시킴. 즉 정책 단위들은 국회의원들의 의정지원과 상시적인 선거정책(공약개발, 여론조사 정책대응)기구 역할을 수행하게 됨.

- 또한 유동성과 휘발성이 높은 대중의 지지를 동원하기 위해, 참여나 소통이라는 이름으로 정당의 후보선출과 단일화 과정에서 개방형 경선제가 일반화됨. 개방형 경선제는 노무현 후보 당선에 크게 기여한 후 보편화되었으나, 그 흥행성은 점차 하락하고 있는 추세. 개방형 경선제는 비당원 국민들과 소통한다는 긍정적 의미로 포장되지만, 역으로 그만큼 정당의 계급적 이념적 기반이 취약하는 점을 반증하는 것임. 게다가 의원 중심의 미디어 정치와 여론조작이 핵심적 역할을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경선과정의 개방이 민주주의의 확대라고 보기는 어려움.

- 이제 정당정치는 표로 연결될 수 있는 유권자들의 선호를 누가 먼저 파악하는지 경쟁하고, 파악된 선호를 그 실현 가능성과 무관하게 공약으로 재정하는 것으로 귀결되고 있음. 이는 유동성 높은 유권자를 단기적으로나마 자기정당에 대한 지지로 묶어두는 기법들의 발달 과정으로 보임. 그러나 이 과정에서 장기적인 시각에서의 평가와 대안 논의는 배제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정치위기를 더욱 가속화하는 또 하나의 계기로 작용함.

① MB심판의 실패와 대선정국의 조기개막

○ 민주당은 선명야당 대역공세에 나서면서, 중도주의화되는 이중적 태도를 띠 것

- 반MB심판이 실패했다는 총선 자체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총선으로 형성된 대결구도와 모든 선거결과를 대선 레이스의 출발선으로 의미를 가짐. 새누리당이 단독 과반을 달성하는 대응을 거두었지만, 이것은 박근혜의 승리이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의 레임덕과 대선정국이 일찌감치 시작되고, 정치적 이합집산과 2013년 체제를 둘러싼 쟁투가 본격화할 것임.

- 민주당은 공천논란에 휩싸이고, 단기적인 이슈였던 사찰, 비리 폭로전에 골몰하는 한편, 막말 논란 같은 악재를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는 전형적인 리더쉽 부재로 참패를 자초했음. 한명숙 대표가 사퇴하고, 문성근 대표 권한 대행체제로 전환. 하지만 당분간 안정화되기 어려울 것임.

- 민주당은 이제 국회 안에서 유효한 정치공세를 벌이기에 어려움 조건에 처함. 각종 MB비리-불법행위 청문회나 특검과 관련해서도 장외공세를 펴겠지만, 실효성 있는 조치들은 새누리당과의 합의로 결정될 수밖에 없음. 이제 민주당이 믿을 곳이라곤 당 외부의 안철수 원장 밖에 없음. 문재인과 안철수가 벌이는 개방형 경선을 통한 야권 단일화 바람몰이 이벤트에 승부를 걸 것임.

- 안철수 원장은 총선 직후 대선출마 의사를 공식화함. 하지만 민주당에 합류하거나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포럼 형태의 비정당조직과 지식인 싱크탱크를 조직하여 독자적인 대선대응을 해나가겠다는 계획임. 그는 자신의 이러한 계획을 새로운 정치실험이라고 밝힘. 일각에서는 그의 이러한 정치기획이 미국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선거정치 전략을 벤치마킹한 것이라고 평가함. 아이젠하워는 민주당의 지지와 공화당의 지지를 동시에 받으면서 출마직전까지 어느 정당에도 가입하지 않았고, 진영논리 대신 사회통합을 중시함.(결국엔 공화당으로 출마하여 당선) 아이젠하워는 안철수와 마찬가지로 정치경험이 없는 군인출신의 인기 비정치인이었다. 특히 안철수는 미국 대선 사상 최초로 TV를 통한 미디어선거로 이미지 선거를 강조한 선거 전략을 중요하게 평가함.

- 그런데 안철수 원장은 진보 개혁적 이념성향이 아니라 중도보수 실용주의적 성향에 가까움. 안철수 원장은 종종 '착한MB'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안철수는 실제로 새누리당 지지자들을 잠식하는 중도주의적 득표력을 강점으로 가짐. 민주당이 장외 대역공세에 나서더라도, 결과적으로 중도주의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이 때문. 게다가 차기 민주당의 당권을 장악할 것으로 보이는 이해찬, 문재인, 김진표, 정세균 등은 친노, 친재벌, 친FTA 성격을 가지고 있음.

- 제1당을 놓친 민주통합당은 개혁입법의 부담을 덜었기 때문에 가벼운 운신을 할 수 있음. 선명야당의 이미지로 반새누리당 진영을 결집시키기 위해 한미 FTA 폐기나 노동법 개정 문제와 관련된 대외 공세를 큰 부담 없이 진행할 것임. 하지만 민주통합당은 선명야당으로서의 대외공세가 대선을 앞둔 세 결집용 정치공세 수준을 넘게 될 경우 발생할 보수역풍을 회피하려는 양면적인 태도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임.

② 거대한 블랙홀로 변한 대선과 야권연대의 수렁

○ 야권연대의 결속력이 강화되고 통합진보당의 환상은 깊어질 것임.

- 이번 총선에서 확인된 바, 올 대선은 초박빙 승부가 예상됨. 더하여 총선 실패로 대선 승리에 대한 강박은 더 커짐. 모든 것이 대선승리의 블랙홀로 빨려 들어갈 것.
- 야권의 패배, 반MB전략의 실패로 민주통합당은 당 외곽의 지원과 수혈에 의지하여 생존하는 처지에 내몰렸음. 이와 같은 상황에서 민주통합당은 통합진보당이 양보한 계급적 원칙에 상응할 만큼의 충분한 대가를 제공할 온정적 지도력도 없음. 게다가 조직적 주도권은 민주통합당이 행사하지만, 가장 유력한 후보는 민주통합당이 아니라, 민주통합당 외곽의 안철수인 상황. 흡사 지난해 10월 서울시장 선거와 비슷한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큼. 당시에 민주노동당은 극심한 민주당의 패권주의로 선거 지지 입장은 유지하되, 선본 인력은 철수하는 이상한 형국이 연출됨.
- 하지만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통합진보당은 이번 선거결과를 여전히 야권연대전략의 성과로 평가하고, 민주통합당의 패배를 야권연대에 진심으로 헌신하지 못한 결과라고 규정짓고 있음. 게다가 새누리당이 다시 제1당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 안에 달성하고자 한 개혁입법과 한미 FTA 재협상 등의 과제들은 또다시 모두 새누리당의 책임으로 돌려버릴 수 있게 되었음. 따라서 총선은 패배했지만, 모든 쟁점을 빨아들이는 초집전의 대선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야권연대의 결속력은 재강화 될 것으로 보임.
- 야권연대 구도 안에서 민주통합당에 대한 통합진보당의 발언권이 상대적으로 커질 여지도 생겼음. 또 민주통합당의 패배로 통합진보당뿐만 아니라 친노 혁신통합진영과 민주통합당 내 외곽의 안철수 지지그룹의 발언력도 높아 질것임.
- 이러한 아전인수식 평가와 야권연대를 재정당화하는 상황논리는 통합진보당으로 하여금 자신들이 민주통합당을 견인해나간다는 착각의 수렁으로 이끌어갈 것임. 그럼으로써 통합진보당은 앞으로 자신의 뿌리인 계급대중운동과의 단절을 돌이키기 어렵게 확정짓고, 대중운동의 분열과 약화를 한층 더 강화할 것임.
- 대선에서의 야권연대는 총선과는 다른 차원의 선거연합을 의미함. 주고받을 후보자리가 300석이나 있는 총선과 달리 대선은 후보가 한자리뿐이기 때문. 대선에서 선거연합을 한다는 것은 차기정권의 권력을 공유한다는 것이고, 차기정부의 국가 정책이념과 정치적 운명을 함께한다는 의미임.

○ 민중운동 다수가 우경화하는 가운데 계급정치의 미래는 더욱 불투명

- 이번 총선 전 과정을 지배한 ‘안철수-나꼼수 현상’은 단순한 반MB-반정권현상이 아니라, 지역주의와 계급대중 정치가 동시에 약화되고, 대중정치인과 포퓰리즘적인 SNS정치 문화가 강화되는 정치(정당)위기의 심화과정임. 안철수는 민주통합당을 한편으로는 이용하지만, 초정파적인 새정치를 역설하면서 탈지역주의, 탈정당적 정치를 강화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음.

- 한편 정당정치위기의 다른 한편은 계급정치와 대중운동 정치의 해체임. 이런 맥락에서 통합진보당은 초계급적이고 탈사회운동적인 국민참여당과의 통합, 원내정당화를 대안으로 실행했던 것.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야권연대에서 통합진보당의 상대적 영향력이 커진 상황은 역으로 통합진보당의 우경화, 자유주의정당화를 더 가속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임. 이번에 불거진 ‘경기동부’ 논란도 당내 민주화와 80년대식 정파조직의 반성과 개혁으로 흐르기보다는, 정치인 중심의 공개 정파화로 변질, 순화될 가능성이 큼.

- 또 통합진보당은 “이번 선거에서 수도권을 돌파했다는 점에서 대중적 진보정당으로 가는 변곡점”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 하지만 정파갈등으로 울산, 창원, 거제로 이어지는 영남 노동자벨트에서의 패배와 (정진후를 제외하면) 노조출신 당선자가 비례대표에서 사라진 선거결과를 놓고 보면, 이는 계급대중정당에서 국민 대중정당으로의 부정적 변곡점이라고 평가해야함.

- 진보신당은 이후 ‘진보세력의 연대를 위한 교수·연구자모임’(진보교연), ‘새로운 노동중심 대중적 진보정당 제안자 모임’¹²⁾ 등과 함께 재창당하여 대선에 대응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음. 그러나 정당지지율 2%에 못 미치는 총선 결과에 따라, 기존 전략에 많은 난관이 예상됨. 한편, ‘사회주의노동자당건설 공동실천위원회’(사노위)는 좌파들의 공동투쟁과 사회주의 정당 건설 방침을 재확인하였고, ‘전태일을 따르는 사이버 노동대학’을 중심으로 민주노총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변혁적 진보정당을 건설하자는 흐름도 존재함.

3] 야권연대에서 연립정부로, 민중운동 생사의 갈림길

○ 노동자운동 강화와 연립정부 수립론 간의 모순

- 한편 노동자운동의 정치적 자신감회복, 사기진작이야말로 신자유주의와의 원칙 없는 연합이라는 비판을 감수하면서, 끝까지 옹호했던 마지막 논거였음. 하지만 실제로 노동자(운동)의 사기가 진작되었는지를 확인할 방법과 기준은 존재하지 않음. 또한 노동자운동의 사기 진작이 임금인상, 고용안정과 같이 노동자들이 얻는 구체적인 이익 수치로 환산될 수 있는 것도 아님.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효과가 불분명하더라도 정치적인 상징으로

12) 소위 민주노총 ‘중앙파’ 활동가들이 주축이 되어, 민주노조 현장 활동가를 중심으로 형성된 그룹.

이용될 수 있는 사례들이 하이라이트를 받아왔음.

- 가장 대표적인 상징은 노동자(운동)출신 국회의원의 당선이었음. 하지만 통합진보당은 당명에서 노동을 삭제했고, 영남노동벨트에서 당선자를 내지 못했으며, 민주노총출신 비례대표는 정진후 전 전교조 전위원장이 유일했음. 더 중요하게는 지난 민주노동당 원내진출 8년의 역사가 말해주듯, 노동자운동 출신 국회의원 당선이 큰 상징성을 띠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국회의원 몇 명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크지 않음.

- 또한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서의 야권단일화 이후 서울시비정규직 정규직화,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이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힌 바도 있음. 하지만 이러한 평가는 원인과 결과를 정반대로 해석하여 야권연대를 사후합리화하는 것일 뿐. 서울시 비정규직 문제는 지난 10여 년간 투쟁해온 비정규직 노동자운동이 거둔 성과의 일부가 반영된 결과이지, 결코 서울시장 선거를 이겼기 때문이 아님. 서울시립대 등록금 역시 대학생들의 폭발적인 반값등록금 운동의 힘이 반영된 결과.

- 더 이상 친노동자적인 후보들이 친자본가적인 후보들에게 이기는 것이 노동자운동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막연한 기대만으로 노동자운동의 원칙과 핵심역량들을 정치적으로 동원하는데 급급하지 말아야 함. 당장의 선거결과와 막연한 진영논리에 기반을 둔 정치동원논리를 넘어서,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이익을 증진시키고 이를 통해 정치적 계급적 단결에 이바지하기위한 숙고와 대중운동적 노력이 요구됨. 그렇지 않다면 이러한 공직선거를 통한 성과들은 노동자운동의 사기진작과 정치적 자신감 증진에 기여하기보다는 노동자운동의 우경화와 분열을 촉진하는 악영향을 양산하는데 그치고 말 것임. 그런 점에서 사상 최초로 진행된 민주노총과 민주통합당 간 정책협약(사실상 일방적 지지 선언)은 뼈아픈 반성을 필요로 함.

- 총선에서 야권연대전략이 일회적인 후보단일화전술의 형태라면, 연립정부 수립은 장기적인 전략적 기획으로서 더 큰 위험성을 가짐. 민중운동 다수파의 총선방침을 비판해 온 좌파운동은 이제 신자유주의 세력과의 연합에 대한 자칫 도덕적 비난에 그칠 한계가 있는 논리를 넘어서야 할 필요가 있음. 시대인식에 기초한 대안운동 전망을 중심에 놓고, 구체적인 연립정부의 상과 정책합의를 비판해야 함. 지난 통합진보당 건설과정, 민주노총의 총선방침 결정과정에서, 대중적인 반대 의견을 조직하고 실질적으로 이를 저지하는데 실패한 원인은 여기에 있음.

○ 하반기, 노동자운동의 정치적·이념적 활로를 도모해야

- 민주통합당은 반세누리 진영의 결집을 위해 한미 FTA와 노동법투쟁을 이용해야하는 상황에 놓여있음. 그러나 그들에게 한미FTA와 노동악법문제는 대선용 정치공세용일 따름임. 통합진보당과 민주노총 지도부 역시 다시 한 번 모든 쟁점을 대선승리와 정권교체로 몰고 갈 것임. 여소야대가 실패한 현 상황에서 여름 노동법개정투쟁은 지난 겨울 야권연대를 위한 동원의 공간으로 변질된 한미 FTA 반대 촛불집회의 전철을 밟을 위험이 커졌음. 정권교체와 이를 위한 야권연대가 만병통치약이라는 논리가 또 다시 반복될 것으로 예상됨.

- 하지만 앞서 민주통합당-민주노총 정책협약을 통해 살펴봤듯이, ‘야당-노총간 정책협약’은 현실적으로 실현되기도 불가능하거나, 구체적인 정책토론과 합의, 입법, 행정적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계급대중운동을 단결과 사기진작보다는 정치적 실망과 분열에 빠뜨리게 되는 경향을 가짐.
- 6월 금속, 철도 투쟁과 8월말 민주노총 노동법 개정 투쟁을 대선 세몰이 동원용으로 전략시키려는 시도는 저지되어야 함. 사내하청, 화물 건설 등 특수고용노동자 투쟁, 한미 FTA폐기투쟁, KTX 철도 민영화 저지투쟁, 쌍차 정리해고자투쟁에 대한 대중적인 지지와 방어를 조직하고, 현장 노동자투쟁의 힘을 강화해야 함.
- 만약 그러한 힘이 국회 안의 야권연대를 압도할 수 있는 힘을 발휘할 수만 있다면, 그러한 상황은 대중운동의 우경화와 분열이 아니라, 거꾸로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사이의 균열, 통진당 내부 균열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임. 물론 여소야대의 실패로 오히려 야권연대 내부의 결속이 강화된 상황에서 이는 쉽지 않을 것.
- 강화될 야권연대와 논란을 심화시킬 연립정부 노선, 그리고 10월 경으로 예정된 민주노총 직선제 선거과정 등을 경과하며 발생할 노동자운동의 분열과 우경화를 막는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임. 민중운동 대다수가 정권교체의 낙관적 전망, 심지어 스스로 연립정부의 주체가 되는 2013년 체제의 환상에 빠져들 때, 민주노조운동의 전통과 원칙을 지키고자하는 노동자운동주체들의 정치적 이념적 생존을 도모해야 할 때임.

<끝>